

2024년도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 감사결과

I

감사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한국해운조합의 주요 사업인 각종 공제 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과 조합원사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자금 대부 및 선박용 연료유 공급실태 등을 점검하고,
- 조직, 회계, 지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추진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2021. 4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2024. 3. 4. ~ 3. 15.(10일간), 감사담당관 외 4명

4. 감사 중점사항

- 인사관리 및 예산·회계 등 기관운영실태
- 조합 공제사업(여객·선원·선박·선주배상책임공제 등) 적정성
- 석유류 공급사업 등 조합원사 지원사업 운용실태
- 여객선 전산매표 시스템 및 터미널 운영 실태점검
- 국고보조금 위탁사업 집행관리의 적정성 여부

1.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

- 「공정채용절차법*」 등에 따라 응시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·연령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

* 직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(용모 등 신체조건, 출신지역 등)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토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, 1회 위반시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

- 그런데 조합은 4차례의 채용에서 지원서에 응시자의 본적·사진·학교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서류·면접 심사위원회에 제공함

* 나머지 23번의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사진, 학교명, 전공, 생년월일 등을 요구함

- 한편, 면접심사 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나 2차례(지부)의 채용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음

➔ **(행정상)** 표준 입사지원서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요구(통보1)

➔ **(행정상)** 응시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“경고” (기관경고1)

➔ **(신분상)** 채용절차법 및 자체 규정 위반 관련자(13명)에게 신분상 처분 요구(경고4, 주의9)

* 채용절차법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 요구 병행

2. 석유류 공급사업 용역업자 운용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- 조합은 「한국해운조합법」 및 정관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함

- 그런데 공고를 통해 일부 조합원사와 석유류 공급사업 용역계약*을 체결한 후 자동연장(1년) 계약조항에 따라 최대 47년간 계약관계**를 유지함

* 전체 2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체수는 23개사(중복제외), 이중 조합원사는 19개사

** 조합원사 계약 건 기준 : 5년 미만 8건, 5~10년 5건, 10~20년 5건, 20년 이상 4건

- 비상근 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임원과 직원 간에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
- 그런데 석유류 공급사업 용역업자 중에 비상근 임원(이사, 감사)으로 선출된 자가 있음에도 업무 담당직원은 해당 임원의 업체와 용역 계약기간 자동 연장 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고,
- 해당 임원도 이사회·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사적이해관계 및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(다만, 해당사업을 특정하여 심의·감사한 정황은 없음)

➡ **(행정상) 이해충돌 제도 미숙지·미준수에 대해 “경고” 조치(기관경고1)**

☞ 조합원사로 구성된 조직의 특수성과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

➡ **(행정상) 석유류 공급사업 용역계약시 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(예 : 자동연장 상한 설정 등)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1)**

➡ **(행정상)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석유류 공급사업 용역에 대한 후속 조치(예 : 신고 및 확인점검 등 이해충돌절차 이행)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(예 : 기존 용역에 대한 처리 등) 마련 요구(통보1)**

3. 임원 인사추천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필요

- 조합은 「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지원자에 대한 자격 및 서류·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조합 이사장에게 최종 후보자를 추천*하고 있음

* 최근 3년간 5차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이사장, 상임이사 등 후보 추천

-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 자들이 조합을 경영하고 조직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보직자(이사장, 이사) 또는 감사자(외부 감사)이므로 서류·면접심사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
- 그런데 조합은 인사추천위원과 임원 지원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

※ (참고) 조합직원 채용시에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험전형위원과 응시자간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·회피·기피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,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「공공기관운영법」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 중

➡ **(행정상) 임원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·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사추천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구 요구(통보1)**

4. 포상 및 제안제도 운영 부적정

- (포상) 조합은 「인사규정시행요강」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포상 이력을 가점하고 있으며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 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함
 - 그런데 주의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을 포상대상자로 추천(대외 1, 대내 1)하고 포상이 수여됨. 이에 따라 해당자는 가점을 부여받았으며 대내 포상자는 해외 체험·연수도 부여받음
- (제안) 조합은 「제안제도운영요강」에 따라 우수제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금과 제안 가점을 부여*하고 있음
 - * 최우수상 100만 원/가점 1점, 우수상 70만 원/0.8점, 장려상 50만 원 0.5점
 - 그런데 '22년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 2명에 대해서는 포상금만 부여하고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➔ (행정상) 결격사유가 있는 포상자가 잘못 부여받은 가점을 공제하고 제안포상자에게는 가점하는 등 규정에 맞게 가점 적용(통보1)

➔ (행정상) 결격사유가 있는 포상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200천 원을 회수(시정1)

➔ (행정상) 규정에 따른 포상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“신분상” 처분(주의5)

※ (참고) 다만 포상 및 제안에 따라 가점하는 점수가 적어 실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음

5.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

- 조합 「공제규정」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공제 관련 분쟁 시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'18년도에 1회만 개최하는 등 실적이 저조함
 - 이는 청구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하고 있지 않아 법적소송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이 주된 사유로 파악됨*

* 「공제규정」에 따라 해수부 추천자, 법학교수, 변호사, 의사, 소비자단체, 해사 관련 기관 경력자, 해사 관련 금융경력자 및 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나, 현재는 해수부 공무원 1인, 변호사 1인, 법학교수 1인, 손해사정사 대표 4인으로 구성

- 아울러 선원공제는 산재보험이나 어선원보험과 같이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역할을 하므로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등 개선 필요

➔ **(행정상)**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추가·변경 위촉 등 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1)

6. 모범직원 해외연수 및 임·대의원 국외 조사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

- 조합은 「인사규정시행요강」에 따라 모범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항만 견학 및 체험 등 해외연수('23년 18명, 중국 장가계)를 실시함
- 그런데 모든 일정이 선진항만 견학 등과는 무관하게 관광지를 방문·관람하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내규 및 사회통념상 부합되지 않음
- 조합은 「한국해운조합법」 등에 따라 비상근 임·대의원을 중심으로 해외 해운·항만 조사연구('23년 2회, '24년 1회)를 실시함
- 그런데 일부 임·대의원이 당초 일정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었던 2차 조사연구를 연달아 추진('23.4월, 6월)함으로 인해 자칫 외유성 국외여행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고,
- 결과보고서를 조합원에게 공유하지 않아 성과 활용도가 낮으며, 경영수지 악화로 '23년말 희망퇴직을 추진하였음에도 조사연구 예산은 1억 원 증액('23년 2.5억 원→'24년 3.5억 원)한 반면,
- 규정상 실소요비용의 절반을 참가자(임대의원)가 부담토록 하면서도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정해 놓아 실제 부담률은 10%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임·대의원 개인 부담액 현실화 필요

➔ **(행정상)** 모범직원 해외연수 시 조합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요구(통보1)

➔ **(행정상)** 외유성 여행으로 비취지지 않도록 체계적 조사계획 수립(예산 포함) 및 참가자 부담액 상향 검토 등 관련 업무개선 추진 요구(통보1)

7. 회원권 이용 및 관리 업무 개선 필요

- 조합은 조합사업 영위를 위한 영업수단으로 골프회원권(4구좌, 23억 원)과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리조트회원권(11구좌, 3억 원)을 운용 중임
 - **(골프)** 「회원권 관리 및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은 조합사업 가입자·권장대상자로 이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합은 임직원의 사적 사용이나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권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골프회원권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
 - 그런데 최근 3년간 일부 직원이 실제 이용자를 대신하여 지속 이용 신청하고 실제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는 등 골프회원권 이용목적 및 내역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
 - 또한 골프회원권 관리부서(본부, 부산지부, 목포지부)에서 골프장 이용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이용자 선정기준이 부재하여 관리부서별 재량에 따라 원칙 없이 이용권이 제공될 우려
 - **(리조트)** 최근 3년간 조합 임직원의 리조트회원권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약 0.1건/년으로 이용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조합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리조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낭비 차단 및 이용활성화 등을 위한 실효적 관리방안 강구 필요
- ➔ **(행정상)** 골프장 이용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과 휴양시설 이용권의 실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요구(통보1)

8. 비상근 임원의 여비 및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

- **(여비)** 조합은 「비상근임원 여비규정」에서 여비지급방식(정액지급제, 실비정산제)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비지급방식을 정액지급제로 해석하고 증빙서류(운임, 숙박) 확인 없이 자체산정한 표준비용*에 따라 최근 3년간 약 345백만 원의 여비를 정액 지급함

* (예) 부산 302천 원(항공료적용), 여수 296천 원(항공료적용), 완도 324천 원(항공+철도)

- 한편, 조합 임직원의 경우에는 실비정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만 정액지급제를 적용할 당위성은 확인되지 않음
- 따라서 조합은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* 등을 위하여 비상근 임원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 검토, 여비지급 체계 일원화(비상근임원↔임직원) 등 여비규정 정비방안 강구 필요

* 정액지급제의 경우 출장 실소요액을 확인하지 않아 여비집행의 투명성 저하 문제가 있음

- (회의수당) 조합은 비상근임원이 이사회, 총회, 대외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회의수당(15~40만 원/건)을 지급중임
- 그런데 회의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다의날 기념식 등 대외행사 참석시에도 회의수당을 지급(총 4건, 60만 원)함

➔ (행정상)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여비규정 정비 요구(통보1)

➔ (재정상) 회의수당으로 오지급된 수당(60만 원) 회수 요구(시정1)

9. 계약 관련 규정 개선 필요

- 조합 「회계규정」에 따르면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런데 이와 같은 계약방식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약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서별로 계약업무가 상이*함
- * 유사 사업에 대해 계약 방식을 다르게 적용, 입찰공고 기간 기준,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배점, 평가위원수 구성, 평가점수 산출방식 등
- 조합 「회계규정 시행요강」에 따르면 청소 및 경비용역 등과 같이 단순 반복적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
-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,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
- 조합 「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기준」에 따르면 여객터미널 위탁용역계약은 「국가계약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「국가계약법」, 「하도급」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그런데 조합에서 사용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에서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비 필요
- ➔ **(행정상)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요구(개선1)**

10. 퇴직자 공로여행 여비 지급 부적정

- 조합은 「여비지급기준」에 따라 퇴직자에게 공로여행여비(직급기준 최대 1천 만원)를 지원하며, 특별승진자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지원 중(규정상 명시하는 바는 없음)
 - 그런데 공로여행 대상자(10명) 중 특별승진자 1명에게는 그동안 적용해 왔던 기준과 다르게 승진 이후 직급(2급→1급)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함(이후 특별승진자 2명은 2급으로 정상 지급함)
 - 한편, 규정상 공로여행이 가능한 기간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이나,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이사장이 연장·승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
 - 그런데 기간 연장의 한도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이 없고, 대상자 중 2명은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과정 없이 기한을 연장해줌
- ➔ **(행정상) 공로여행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(적용직급, 기간연장 및 확인 절차 등)을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1)**

11.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업무 소홀

- 조합은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라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
- 그런데 조합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활동이 규정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*

* 접속기록(계정, 접속일자, 접속지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)이 아닌 개인 정보 파일 접근 횟수만을 점검,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이에 대한 점검 미흡

- 조합 「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지침」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한 및 조치사항*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전자 결재에 의한 문서로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* 문서 제공목적 외 이용금지, 사용 목적 달성 후 파기, 사후 관리 실태 확인 등

- 그런데 조합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제한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전자 결재가 아닌 메일로 회신함

- 조합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 중임

- 그런데 조합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도 일부 항목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상위 규정에서 정한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개정 필요

➔ **(행정상)**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“주의” (기관주의1)

➔ **(행정상)**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1)

➔ **(행정상)** 조합에서 운영중인 내부 관리계획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(개선1)

12. 선원공제 지정병원 운영 개선 필요

- 선원공제는 「선원법」에 따라 선원의 산업재해보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재해선원의 빠른 치료와 보상을 위해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* 의료비 등 공제금 청구가 조합과 협력관계로 연계된 병원으로,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 치료 시 재해선원이 의료내역 증빙자료를 해운조합에 직접 제출·청구 필요

- 그런데 현재 선원공제 지정병원이 인천,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므로 재해선원의 의료선택권 및 보상편의를 위해 실태파악을 통한 지정병원 추가지정 등 검토 필요

➔ **(행정상)**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을 포함하여 지정병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1)

13. 선원공제 계약관리 업무 소홀

- 공제계약은 조합 「공제규정」 및 「공제약관」에 따라 가입자가 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조합이 검토·승낙함으로써 성립함
 - 그런데 선원공제 가입신청서와 증권을 확인한 결과 신청일이 공제 증권의 공제시작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서가 확인(9건)되는 등 선원공제 계약업무 소홀
- ➔ **(행정상)** 선원공제 관련 계약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“주의” (기관주의1)